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3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공무원연금기금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공무원연금기금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안위 소관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행안부차관, 재난안전본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위, 인사혁신처, 이태원특조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07분)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재 차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등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와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번 기획조정실 사업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행정안전부정보화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부내전산망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해서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포맷인 HWP를 줄이고 오픈형 포맷으로 전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내 한컴오피스의 연간 라이선스 구입예산 3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수용 곤란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곤란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행정안전부만 HWP를 못 쓰게끔 해 버리면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도 곤란하고요. 업무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MS 워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 취지를 감안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

○고동진 위원 차관 이야기는 이해는 되는데 이 문제를 언젠가는 풀어야 돼요. 이게 HWP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읽을 수도 없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HWPX를 지금 사용하게끔…… 저도 오늘 아침, 어제 결재할 때도 다 문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가 학습·인지는 데 필요한 오픈형 포맷으로 가는 것으로 점점 확산시켜 나가면서 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돌아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쓰는데 그 라이선스를 추가로…… 새로운 문서 생성 말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못 쓰게 되면 문서 작성 같은 것은 안 되고 읽는 것만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은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HWP, 한글과컴퓨터가 만든 프로그램을 법령에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이용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결국 생산되는 문서가 폐쇄형 문서가 되는 것이다……

이 문서의 틀이 사실은 HWP가 아니라 MS의 라이선스를 사도 되는 거거든요, 워드를 사도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왜 이것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한글과컴퓨터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못 읽는 거지요. HWPX도 얘기를 했지만 HWPX도 결국은 국내에서만 읽는 거고 해외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픈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환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한국만 구매해서 쓰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AI 정부나 전자정부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고동진 위원 이게 행안부가 먼저 모범을……

○소위원장 위성곤 삼성에 계셨었지요? 삼성이나 LG나 GS나 이런 대기업은 워드를 쓰지 않습니다. HWP를 안 써요.

○양부남 위원 이거 삭감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올해만, 2026년 예산만 반영하면 2027년부터는 안 할 겁니까? 계속할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도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아예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부처, 자치단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 간 소통을……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 삼성은 훈민정음이라는 워드 프로그램도 있었고 MS 워드도 있고 한글만의 장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삼십 년 가까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것이 AI 시대에는 맞지 않는 문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게 행안부만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자치단체의 의

견도 듣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공감하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작정 반대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보류하고요.

○서범수 위원 이 방안을 마련하는 데가, 그러면 행안부가 방안을 마련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것도 아니지요. 행안부하고 과기부라든지 관련되는데……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이나 이것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관계 부처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범수 위원 이게 행안부만의 문제 내지는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2026년 예산 반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같이 보여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나와야지만이 결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국회도 아마…… 국회 다 MS 워드 쓰나요? 우리가 법안 검토나 뭐 내고 할 때도 다 이런 것으로 내고 있고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안 하는 거지요. 아무도 해결을 안 해서 사실은 삭감을 해야 이것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공식 의제로 삼아서 회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예요. 결국은 희생타가 행안부가 되는 거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가 될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쟁점이 되니까 보류해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번에서 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전자문서소통시스템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2026년에 민간 SaaS 사업을 위해서 141억 1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글·MS 등 민간 SaaS 구독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존 공공용 민간 SaaS 활용 촉진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을 위해서 2026년에 40억 1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부터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여 현재 903종 데이터가 개방·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40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기존 사업과 연계성 및 차별성이 불투명하고 5년간 매년 206억 원 집행 시 10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206억 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반면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 세 가지 꼭지인데요. 그 내역사업 중 하나인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1억 6800만 원이 반영돼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부처하고 지자체의 AI 사업 컨설팅 관련 사업인데요. 260개 부처·지자체 대상으로 100여 개 AI 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1억 68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추가로 48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들은 다 SaaS 관련해서도 단순 민간 SaaS 이용료 지원이 아닌, 이게 바로 위원장님 강조하시는 AI 기반의 새로운 업무환경을 공직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두 번째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도 과기부에 예산이 상당수 있긴 있는데 과기부는 전 부처라든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망라한 거고 행안부 사업은 그 가운데서도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시범적으로 특화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열 가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살펴봐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ISP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라든지 사업내용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내 세부사업 계획까지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I 사업지원센터 증액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사업지원센터 수용이라고 하면 얼마를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48억 3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48억.

○소위원장 위성곤 48억, 오케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지금 공공부문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 AI로 전환하는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인력 양성,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거라고, 중앙부처 플러스 지자체까지 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이용에 행안부가 지금 열 가지 정도 데이터를,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중의 가장 핵심적인 두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를 들어서 교통·물류를 하려면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을 계속 도입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특화된 것으로 공공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재난안전에 싱크홀 같은 것 늘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정리해 놓으면 어떤 부분이든지 관심 있는 부분에 그것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싱크홀 위치라든지 대응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있어서 질병별 이미지 같은 것을, 영상자료를 AI가 쉽게 읽을 수 있게…… 지금은 각 개별 병원 단위로 구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행안부가 해 주면 이쪽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법률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제한이 돼서 구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도 직접 들었던 민원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형사 관련해서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까지 단계적으로 AI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행안부가요? 행안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판결문……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판결문. 그것 법무부도 있는데 왜 행안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홀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 관련해서 전국의 지하의 싱크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부터 먼저 다 만들고 그것 빨리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 취득해 가지고…… 취득도 아직 안 돼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게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달희 위원 지금 어느 어느 부서가 싱크홀 관리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행안부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는 게 늘 통일성 있고 오픈 데이터로 돼야 AI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행안부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1년 동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찾아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게 100%인지 8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AI가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3번, 기존의 공공용 민간 SaaS 활용 촉진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어디……

○고동진 위원 3번, 3항.

○박정현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말씀하시는……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존의 차별성하고,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 민간 SaaS를 도입할 때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연계·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간의 AI 기

반 소통·협업 도구 예를 들면 조직정보, 인사정보, GPKI나 모바일 공무원 등 인증과 같이 이런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중복될 것 같은데……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3항 공공데이터는 법에 따라서 행안부 소관 담당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AI 공공데이터 사업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3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것을 학습용 데이터로, 지금도 그냥 데이터는 공개를 하다 보니까 연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AI가 읽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가공이라든지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일부 AI 데이터 가공·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하는 것은 서로 업무 조정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입니다.

과기부 같은 경우에 민간 데이터 개방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공 관련된 데이터들도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5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과기부 것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기존의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AI가 학습하기 좋게 품질도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을 하고 표준화해서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차원이 조금……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행안부가 그것은 AI 운영하는 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중심된 조직이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공공데이터 분야에 한해서……

○고동진 위원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기부하고 얘기를 하면 이 3항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할 게 워낙 많아서 중복이 안 됩니다.

○고동진 위원 문제 제기를 박정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판단을 하면 되실 문제고.

그다음에 4항에 AI 서비스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맨 위에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매년 5년간 206억 원 집행 시 1000억 원 대규모 사업임에도 ISP 수립 없이’ 이렇게 되니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입니다.

저희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102억 정도는 중앙의 공통적인 서비스들을 AI 도입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AI 입법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모든 부처들이 입법을 하는 데 조항들 참고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중복은 없는지 이런 입

법 지원 서비스라든지 공무원들이 지방세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지방세 상담을 하려면 항상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AI 학습시켜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상담이나 판례 같은 것들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중앙부처 대상 사업이고요. 이게 한 100억 정도 되고.

지방은 저희가 AI 주민 케어 서비스라든지 AI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같이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실패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봄 케어라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노인들한테 전화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들은 잘 되고 있고 어떤 데들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잘 되고 있는……

○**고동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는 그만큼을 안 쓰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이게 지금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방 것은……

○**고동진 위원** 적어도 중복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중복은 발생 안 하고요.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사업을 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들이 시행착오 없이 이 모델을 갖다가 쉽게 성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아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ISP 수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수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그래도 5년간 계속 1000억이 넘잖아요, 한다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ISP 수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기존의 부처나 지자체 공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AI를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가 자치단체나 부처별로 기존에 있는 건데, 입법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AI가 지원하는 방향을 특화된, 그렇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ISP 계획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기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 같은 경우, AI로 갈 때는 과거 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AX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ISP는 없이 예산 같은 게 반영돼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정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받아서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런 쪼가리 쪼가리 갖다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사업 자체가 과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ISP부터 수립하고 시작하는 게 안 맞아요?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단일 해의 200억 사업이 아니고요, 5년 동안. 1000억이 아니라 이게 각각의 사업들을……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뜯어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한 10억, 20억이고 작은 사업들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부안에 담겨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서의 어떤 계획서를 세워야 되지. 그렇다고 생각안 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신규 사업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좋다, 예를 들면 쪼가리 쪼가리로 여기에 조금 붙여 주고 저기에 붙여 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개별 항목에 대한 것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개별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다 세부적으로 수립될 예정이 고요.

○서범수 위원 예정이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천천히 가기보다는……

○서범수 위원 조금 주객이 전도됐다, 지금 이 부분은. 아무리 급해도,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 때어 쓰듯이 이것을 그냥 별다른 구체적인 어떤 ISP 계획 없이 이렇게 간다? 그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러니까 ISP 자체가 필요할 만큼의, 이게 다 합치니까 250억 원으로 커서 ISP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시지만 이 사업은 아마 한 100개 정도로도 나뉘질 수 있거든요, 중앙과 지방에?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차관님 말씀은 한 사업, 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을 다 총괄한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붙여 놓으니 206억이고, 5년간 합치니까 1000억이 넘는다. 그래서 크게 보이지만 사업 내용별로는 10억씩 20억씩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 다 이런 쪼가리 데이터 사업이 있으니까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로 정한 거잖아요? 과기정통부가 해라 하고 이제 예산을 거기로 몰아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전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너희가 해라 하고 협업이 필요해요.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각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잔잔한 일들이……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필요하니 그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몰아줘야 실질적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가,

지자체들은 가면 행안부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서를 다 같이 중앙부처로 보고 일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AI 총괄은 과기부고요. 산업 분야는 산업부고 행정·안전 분야는 공공 분야입니다. 즉 중앙부처의 업무 형태를 AI로 전환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형태를 AI로 도입하는 것을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AI로 나가는 마중물이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조금 열악한 데는 ‘우리 하고 싶은데 서울이 하는 것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면 이게 또 서비스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수요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자체에서는 114개의 공통 과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우선순위가 높고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AI로 적용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졌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토의……

○**박정현 위원** 제가 감액안을 낸 거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위성곤** 예.

○**박정현 위원** 일단 저는 감액안 낸 것은 철회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리가 좀 정확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여기에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할 때 그러면 과기부랑 정확하게 협업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표준이 안 되면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도 좀……

○**이달희 위원** 그래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지.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함께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기준은 당연한 말씀이라서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NIA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고, 큰 기준은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저희는 특히 공공데이터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데이터 중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거나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톱 100을 선정했고요. 그중에서도 10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이라든지, 아까 싱크홀 같은 것을. 그 안이 여기 10개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여기까지……

○**박정현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낸 의견이기 때문에 삭감은 철회하고 다만 부대의견

을 좀 달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떤 부대의견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하고의 협업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표준을 만드는 이 내용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나중에.

3번 항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2번과 4번…… 충분히 토의 시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면 밤새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빨리빨리 결정하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AI 관련된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달희 위원 이 싱크홀 관련은 국토부나 지자체들이 안전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결국 과기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하고 이중으로 될 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반드시 이중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부처 간의 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반적으로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반 민간 데이터는 각 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적인 AI 기술과 관련된 것을 주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전자문서소통시스템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께서 감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원안 유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보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항은 감액안과 증액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을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률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78.2%인데 예산은 2021년 96.1% 운영률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그것과 다르게 증액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2억 1100만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셨고요.

두 번째 사항은 1번 사항과 비슷합니다. AI 학습 데이터가 좀 어려운 폐쇄형 포맷인 HWP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화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는 한컴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용 272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송구스러운 말씀 드린다면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신중검토로 해서, 저희가 매번 매년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저조한 것은 아예 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산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하고요. 용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각 역이나 고속터미널 이런 데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워크센터 내에 한컴오피스 SaaS처럼 운영하는 부분은 아까 1번 할 때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 유지 의견이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의결하기가 난감한데 오시면……

○이달희 위원 양부남 위원님의 감액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보류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5번의 스마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수정 사유가 2025년 7월 기준으로 78.2%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025년 10월 기준으로 76.7%고요. 이제 또……

○서범수 위원 왜 더 내려갔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5년 10월 기준으로 76.7%입니다.

○서범수 위원 7월 기준으로 78.2%인데 왜 더 내려갔어요?

○고동진 위원 여기 7월 기준으로 써 있잖아.

○소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수정 사유에 보면 25년 7월 기준으로 78.2%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10월 기준이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월 기준으로는 76.7%.

○서범수 위원 왜 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때 9월에 아무래도 국정자원 화재가 있어서 시스템 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송구스럽게……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많이 끼쳐 드린 측면이 있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계속 사과 말씀 드리고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충분히 내용은 숙지하셨으니까요,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6번 사항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이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20년 전에 구축돼서 노후화가 심해서 보안에 취약하고 언제라도 시스템이 중단될 위험이 있어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89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필요합니다.

다만 액수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일단 위원님들 오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정보보호인프라확충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보강 및 개선을 위해서 76억 원, 중앙부처 인증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점검을 위해서 23억 5000만 원, 간편인증 확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기능 고도화 5억 2000만 원 해서 총 10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것도 수용 의견 드리구요. 예산 증액 필요성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정부 온 나라 이런 것 해킹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2일 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발표도 했는데, 거기에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예결위원장께서 증액 책임지시겠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증액 의견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8번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유희 공공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 공유누리의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2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2025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5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9번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 세부사업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다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8억 64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것도 저희 수용합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난 국정자료 화재 이후에 보니까 저희 KLID에도 재해복구시스템(DR)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국감에서도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중화 조치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에서 수용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특히 주민등록시스템은 여기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0번 사항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AI 대전환에 따라서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서 6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번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AI 정부24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110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당연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AI 기반의 통합적·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데이터 이런 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부처별로. 이것을 합쳐야만 학습하기도 좋고 AI 활용하기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 잠깐만요.

○소위원장 위성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게 의견 듣고서 같이 의견을 내 주기는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고동진 위원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2번 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분산된 행정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 50억 3100만원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구축예산의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12번하고 11번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중복이 되는 부분 없나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에 인허가종합시스템이 안 들어가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11번은 행정서비스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부터.

12번은 뭐냐면 민원 있지 않습니까?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서범수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이것을 또 구분을 해요? 그러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에 들어가면 인허가 관련해서 신청하고 이런 게 없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아닙니다. 뭘 자료를 떼거나……

○서범수 위원 그냥 다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것을 나누나요?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데 인허가 신청하는 것도 행정서비스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은 11번이 훨씬 더……

○서범수 위원 넓은 개념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하기에는 쉬운 거고요. 12번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도 이리로 핑퐁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에서 다 모아서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자는 게……

○서범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단지 행정서비스통합포털 그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소위원장 위성곤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 이세영 디지털정부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의 행정서비스통합포털 관련된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24, 정부24+의 기능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추가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의 원스톱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업 영업신고 같은 것들은 복합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주로 관공서의 민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좀 구분이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그렇게 자꾸 세분화시켜서 벽을 치려고 그래요, 행정서비스를?

○**고동진 위원** 서범수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서범수 위원** 인허가 따로, 행정서비스 따로.

행정서비스에 인허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통합서비스를 들어가서 거기에 인허가 부분은 또 한 분야로 만들어서 죽 들어가면 되는 건데 행정서비스 정부24 따로, 인허가 부분 따로, 이래 버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주체 측이 어렵겠지요, 주체 측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제가 디지털 업무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왜 문제가……

2023년도에도 서비스 장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원인을 못 찾은 이유가 공무원들은 A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별도로 B를 만들면 A에서 망가진 거랑 B하고 찾기가 쉬운데 A를 만들어 놓고 A다시로 붙인 거예요, 계속 수십 년간.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하기도 어렵고 망가지니까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훨씬 복잡하고 민원인들, 국민 입장에서는 수월한 거거든요. 이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무슨 자격증 같은 것 분실해서 받을 때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받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좀 쉬운 거고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생계에 필요해서 민원실 갔더니 국토부 가서 뭐 받아 와라 또 어디 가라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편하게 해 주자라고만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합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설명이 되셨지요?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3번 세부사업 건입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우수사례 공모전, 학술세미나, 벤치마킹·간담회,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해서 사업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이것은 20년 가까이 안 됐어요, 주민자치회? 벌써 다 판단이 났을 텐데 또 뭐 검증해야 될 게 있나요? 국회에서 지금 입법만 남은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필요 예산이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정과제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두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기존에 2억 94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안, 기존 정부안에?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 내용이 됩니까, 2억 9400만 원 예산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지방자치의 날하고 균형발전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요. 그 행사인데 성격이 다른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요?

이것 기존에 2억 94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돈인 것 같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플러스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을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기존의 사업하고 추가로 되는 이 5억하고 성격이 맞냐는 거지요, 일단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왜 이게 슬쩍슬쩍 들어가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유사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이 지자체 경쟁력 그다음에 지자체 균형발전의 날과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도 넣게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제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건데 법제화가 추진되기 전에 법적 근거 없이 지금 벌써 시범사업을 하는 게 1411군데인가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도 있고 2개가 다 있는 데도 있고, 사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다 있지요.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요. 성격은 다른데, 시범사업을 1411개인가를 하잖아요. 설사 여기 5억을 넣는다 칩시다. 얼마를 뜯어 붙일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5억이 들어가면 정부의 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해 주시기 때문에 법은 곧 통과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담아 주시면 잘하게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달희 위원 통과되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의 세부사업명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화가 되거든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지금 그것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세부사업명 수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서범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모양이 안 맞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을 조정해서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세부사업명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 주민자치회 법제화되거든 하라고요. 그것 뭐 어렵나요?

○양부남 위원 이것 저희 실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신 내

용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꼭 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행사비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고쳐서……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거니까, 돈 5억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법제화해서야만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동진 위원 법제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나 예산은 너무 크지 않으니 발제하신 분 얼굴 보고 해 달라?

○양부남 위원 예, 그렇지요.

○고동진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넣어서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지요?

○양부남 위원 예, 신규로 하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도 아마 재정 당국……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게 지자체경쟁력지원 세부사업 안의 내내역사업들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뿐만 아니라 지금 한 열 가지 정도, 내내역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중앙·지방의 협력회의 운영, 합동평가시스템 운영,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 지방행정의 달인, 다산목민대상 시상, 되게 많거든요. 그중 하나의 사업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예, 내내역에 하나의 사업으로 편제하는 것으로……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데 그리로 넣으세요. 하나 넣으세요, 그냥.

○고동진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금액이 되게 적다 보니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안에 포섭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서범수 위원 그러면 내내역 안에?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한 50억쯤 하지 않고 왜 5억을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서범수 위원님 취지를 담아서 별도, 그냥 이 명칭을 주민자치회 법제화로 쪼개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서범수 위원 한 10개 주면 거기에 맞는 데 집어넣어 버린다고, 새로 만들 것도 없고.

○소위원장 위성곤 예, 내내역에 넣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이게 가장 낫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또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새로 만들 것도 없고 거기 비슷한 데 끼워 넣어 버리라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법제화 빼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14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번 사항은 새마을운동지원 세부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먼저 새마을운동중앙회 연수생활관이 지금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설계

및 공사비로 3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수용하고요. 새마을운동 종주국으로서 한국에 와서 연수받거나 개발도상국 젊은 리더들이, 새마을운동 리더들이 여기서도 많이 숙박하면서 생활하는데 42년이나 돼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어쨌든 재정 당국은 어려운 국가재정 때문에 이게 계속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라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말이 이상한데. 숙원사업이었다는데 재정 당국과 재정을 협의해야겠다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런 표현을 안 쓰면 또 저기……

○소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꼭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지역구가 서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연수받은 국가 리더,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죽 보고 그랬는데, 이것 사실 상황이 좀 심각한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만 해도 이쪽을 한번 거쳐 갔고 지금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참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된 두 꼭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자유회관 대전지부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 있어서 이에 대한 안전보강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자유총연맹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1억 6100만 원이 자유총연맹 규모나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원래 금액이?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체 지원 보조금 총액이 1억 61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전체 보조금이?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게.

○소위원장 위성곤 행사성 경비로 지원되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동안 자충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용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유회관 대전지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자유회관도 증액하는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어제 도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안이고요.

다만 재정 당국은 계속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임대해 주는데 정부가 굳이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게 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계속 D등급입니다. 세 번이나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고, 마찬가지로 오래 된 건축물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재정 당국의 그 발언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건물주가 건물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그것을 리모델링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도 이것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계속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건물주가 져야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소위원장 위성곤** 이 건물은 국유재산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 소유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임대 들어와서 사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1%……

○**고동진 위원** 여야를 떠나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안전인데?

○**박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해야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일단 자유회관 대전지부의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액에 대해서는?

○**이달희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감액하면 여기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32억 원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내외로 해 주고 있고요. 국민운동 3단체라 그래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충은 따로 한 1억 6000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채현일 위원님 말씀은 그중에서도 자충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한 겁니다.

○**서범수 위원** 패썹죄에 걸렸구먼.

○**이달희 위원** 1억 6100만 원이 어떻게 쓰였어요, 그동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DMZ 평화둘레길 같은, 자충은 안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달희 위원** 운영비, 급여로 쓰이는 부분은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다 사업비입니다. 자충은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쪽의 추진사업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채현일 위원님 어떤 의도인가는 저도 알겠지만 운영비 자체를 다 깎아버리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 사업비 자체를 이렇게 해 버리면……

○소위원장 위성곤 어떤 사업이나 하면 뒷페이지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어저께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계셨지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

여기 지금 8100만 원 들어간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 발굴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거의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둘레길 대장정도 청년세대 간다고 그러는데 몇 명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회비 걷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동안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자충이든 어디든 간에 꽤썸죄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 단체에서 하면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자충 지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백억씩 지원하는데 사업비 1억 6000,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이념적 이런 성격을 말씀하셔서……

○고동진 위원 아니, 꼭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광희 위원님,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에서 자기네들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안 하겠어요?

○이광희 위원 그 전에도 계속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계속했는데 안 돼서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적을 하면 고쳐야 되는데.

○이달희 위원 저는 공동체 행복지킴이 이것은 자충이 안 해도 될 일 같고.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이 사업은 정말 잘하라고 하면서 살려서, 전액 삭감 논의도 있었으니까 성과를 내라고……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이 사업은 계속 자충이 해야 될 일 같거든요.

○이광희 위원 이것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8000만 원 갖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작년에 148명 참석했습니다. 90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8000 이것만 살리지요.

○양부남 위원 8000 하면 되겠네요.

○이달희 위원 예, 8000은 살려 주시고.

○고동진 위원 6000만 깎으면 되지 뭘……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말씀처럼 8000만 원은……

○이광희 위원 아니, 자충 사업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다 사업비 줘야 돼요. 왜 자충만 줍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 기존에 주던 것을 지금 자꾸 깎자는 얘기인데……

○이광희 위원 저는 이것은 꼭 깎아야 된다고 생각……

○고동진 위원 아니, 아까 그 5억도 늘렸는데……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광희 위원님……

○고동진 위원 양 위원님도 목소리 좀 높여 주세요.

○**이광희 위원** 아니, 여기 있는 이것은…… 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는 것 그것 다 회비 내서 가거든요, 수백 명씩 가는 것.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또 그거니까……

○**서범수 위원** 우리가 결산도 했지만 사업 추진이 조금 미진하다고 해서 자꾸 이걸 다 깎자 그러면 많은 걸 깎아야 돼요.

○**이광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국회에서 계속 하는 것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8100만 원만 삭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 의견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8100, 절반 깎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해서……

○**소위원장 위성곤** 하여튼 이광희 위원님께서 좀 받아 주시지요.

○**이광희 위원** 정치적 중립은요 전 정권 때는 뺐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다시 넣었어 요.

○**소위원장 위성곤**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기특하잖아요.

○**이광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이번 정권의 말은 안 들겠다는 공식적 선언이고 지난 정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한 단체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보류해 주세요.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6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세부사업 건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관련된 건데요. 재정자립 기반 및 중앙사무처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10억 원의 예산 산출 근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사업비 각각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중앙협의회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5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다만 재정 당국은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만 운영비는 지원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아마 계속 반대 의견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 건물 활용하는 부분 이것은 건물 소유주가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한다 만다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기재부면 기재부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우리가 해도 아마 기재부가 왜 행안부가 이것을 하나 마 나 할 것 같습니다.

- 서범수 위원 그것 올려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해 주신 대로 대응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예산 들어온 게 보조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들어온 거예요? 일반사업비예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조비인데……
- 소위원장 위성곤 보조금?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니까 이것 밑의 것은 자본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경상보조인데 운영비 지원이고요.
- 서범수 위원 우리가 보면 3대 단체라 하잖아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국민운동 3단체.
- 서범수 위원 국민운동 ‘새마을’, ‘자충’, ‘바르게’. 그중에 유독 바르게살기만 지원이 많이 약했어요. 그렇지요, 이때까지?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자산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 자충은 회사도 있습니다. 발전사도 있지 않습니까?
- 서범수 위원 예.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많고, 회원수도 제일 많고 회비 납부도 군 장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바르게살기는 가장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비만 갖고는……
- 서범수 위원 회비로만 모아서 하고……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회비만 갖고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좀 어렵지요.
- 서범수 위원 그때 국감을 할 때도 보면 ‘왜 우리는 별로 지원도 안 받는데 내가 국감을 가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안 맞느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국민운동 단체는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 소위원장 위성곤 안 그렇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정현 위원 사업비만 지원해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사업비를 일반 민간 시민단체보다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사업비인데 그 정도밖에 안 가고요. 여기는 그래도 한 1억에서 2억, 10년 전에는 훨씬 많았고요.
- 소위원장 위성곤 바르게살기에는 총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여기에 1억 8900만 원입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이게 전부예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열악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 소위원장 위성곤 아까 보니까 자유총연맹은 얼마 지원해 줘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억 6100만 원……
- 소위원장 위성곤 1억 6100만 원.

- 고동진 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자치제 그것도 회비 내라고 그래야 돼.
- 이광희 위원 단체에서 하는 것을 국가 운영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하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 소위원장 위성곤 그거랑 이거랑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비를 다른 단체는 지급합니까?
- 소위원장 위성곤 안 하지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요. 다 안 해 주니까…… 재정 당국의 논리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는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만이라도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줍시다, 바르게살기운동법이 있고 거기에 지원 근거 같은 것은 있는데 사업비는 대지만 운영비를 주면 또 다른 데도 다 달라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 양부남 위원 많지는 않은데 운영비를 다른 단체는 주지 않는데 여기만 줬을 경우에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나 이것이지.
- 박정현 위원 그 새마을은……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데는 이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양부남 위원 필요 없어요?
- 박정현 위원 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자산이 많습니다.
- 소위원장 위성곤 새마을이랑 자충은 자산이 워낙에 많아서……
- 박정현 위원 바르게살기만 지금 없는 거예요, 자산이.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인원수도 더 많고 자산도 많고, 다만 새마을 이런 데는 또 하는 사업이 많지요. 외국에다가 초청도 하고 국제행사도 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고요.
- 소위원장 위성곤 많이, ODA 사업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양부남 위원 아니, 이렇게 돈도 없는데 왜 이 단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웃음소리)
- 소위원장 위성곤 누가 만드신지 아시잖아요, 바르게살자?
- 양부남 위원 단체를 하려면 능력은 돼야 되지.
- 박정현 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 소위원장 위성곤 누가 만들었어요, 바르게를?
- 이광희 위원 이런 국민운동본부들은 다 필요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 양부남 위원 너무나 바르게살기라 돈이 없네.
- 이광희 위원 거기가 제일 가난해요.
- 서범수 위원 바르게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 양부남 위원 바르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 소위원장 위성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서범수 위원 좀 지원해 주시지요.

○양부남 위원 지원하지요, 뭐.

○고동진 위원 뭐 얼마 된다고.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달희 위원 지원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아니, 8000만 원 깎는 것도 그래 놓고서 10억 원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 바르게 살겠다잖아.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둘 다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증액을 좀 조정을 해서.....

○소위원장 위성곤 예.

○양부남 위원 아니, 이 10억을 다 증액?

○소위원장 위성곤 그냥 해요, 이왕 하는 거면. 어차피 기재부 반대해서 안 될 텐데.

○양부남 위원 기재부에서.....

○소위원장 위성곤 생색이라도 내요. 서범수 간사님 생색은 내야지.

○서범수 위원 선심이라도 씹시다.

○양부남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간사님이 하셨구나.

○박정현 위원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여기 다 조직 많이 해 보신 분들이고 저는 시민단체만 해 봐 가지고 이런 것 아주 불쾌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17·18항은 다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건이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 사업 예산을 31억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국민통합이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유를 제시하면서 총 31억 증액 요구하셨는데 총 31억의 세부사업들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 수가 지금 29명인데 5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회의수당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또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따라서 운영예산 2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하고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위원회 지원단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영묵 통합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통합위 위원이 위촉 중에 있고요.

○서범수 위원 위촉 중에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위원들이 위촉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관련 규정도 법제처랑 협의해서 인원 확대 등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반을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예산을 이 정도로 신청을 하려면 예를 들면 대국민 소통행사 예산 안…… 다른 것 3개는 지금 신규잖아요, 다?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영목**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거기에 얼마가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영목**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현 정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통합 실질화 방안을 마련해서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국민통합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 기반이 되는 부분은 국민통합 실질화 방안을 토대로……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데 단지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무슨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그냥 ‘그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충 잡아 보니 35억입니다’,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나요, 그래도 예산인데?

○**소위원장 위성곤** 산출 근거가 있어요?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영목**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산출 근거를 서범수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국민통합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영목**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을 거야, 아마.

○**고동진 위원** 이것은 좀 심하다.

○**이광희 위원** 이거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 정부 때, 내가 두 번 들어오니깐 지난 정권 때……

○**서범수 위원** 그래요? 왜 없는가 싶어서 자꾸……

○**이광희 위원** 공수가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500억……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광희 위원** 아니, 냉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좀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통과시켰는데……

○**고동진 위원**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이게 뭐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플랜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박정현 위원** 아니,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은 필요하지요. 지금 어쨌든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 오래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결론 빨리 내실 거예요?

○**고동진 위원**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박정현 위원** 위원님, 이거 그냥 가시지요.

○**이광희 위원** 작년에 500억도 해 준 사람이에요, 제가.

○**고동진 위원** 아니, 저기 1억 6000도 반 깎고 그러는데……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 성과 때문이지……

○이광희 위원 아니, 그것은 단체고……

○고동진 위원 삼십몇억짜리를……

○이광희 위원 보류해야 돼요, 이것.

○서범수 위원 잠시 숨을 쉬었다 갑시다.

○박정현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두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떻게 저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진짜……

○소위원장 위성곤 같은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나는 작년에 없었어.

○고동진 위원 이것은 좀 심하네.

○소위원장 위성곤 금액이 300억도 아니고 30억밖에 안 돼서……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00억인가 500억……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말씀하시지요. 진행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9번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인데요.

국립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건립사업 개요는 박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동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행안부에서는 현재 자원봉사 연수시설 마리안느마가렛이라는 것을 고흥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하기에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행안부는 신중검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전국에 자원봉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이 감축되었던 자원봉사 인력에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연수원이 없고요. 자원봉사단체는 이런 것 이수하면 일종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랍니다. 2개가 있어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순증에 동의합니다.

○서범수 위원 사실 여기는 행안위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기재부에 줄지 안 줄지도 좀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행안부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재부 입장을 이야기하는…… 지금 기재부차관이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면 정정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자원봉사 연수원은 시도에 하나씩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 종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박정현 위원 시도에 하나씩은, 그래도 권역별 이런……

○이달희 위원 종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큰 수해나 이렇게 나면……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인데요.

○소위원장 위성곤 반대예요?

○이광희 위원 왜 반대냐면, 그러니까 국립 자원봉사 연수원이 되려면 자원봉사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이·통장과 관련해서 그 법이 없어 가지고 연수 못 하고 있거든요, 연수원은커녕? 그래서 이번에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위성곤 무슨 법안이에요, 자원봉사?

○이광희 위원 아니요, 이·통장협의회를……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인데……

○박정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하물며 그런데 자원봉사 관련된 이걸 하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와 관련된…… 연수원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아니, 상위법도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국가 차원의?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그런데 일단 연수원부터 만들자?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위원님, 자원봉사 기본법이 있고요.

○이달희 위원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다음에 매년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 국가계획을 발표합니다. 4차 국가기본계획에 이 연수원을 만들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그래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정지기 때문에 법도 있고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지요.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지.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 장소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태안은 그때 그 유류사고 난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달희 위원 의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 장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제주로 가야 되는데……

(웃음)

○박정현 위원 왜 그러세요? 제주에도 하나 만드시는 걸로……

○이달희 위원 태안은 의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6쪽인데요.

이것도 자원봉사 관련 사업인데, 2026년이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 문화 캠페인 추진사업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 관련 예산 총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으시고요.

또 K-자원봉사의 가치와 활동을 알리고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예산으로 K-자원봉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증액 요청 안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첫 번째 것 자원봉사 캠페인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거의 안 해 오고 있고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지 AI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업비를 주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같이 가야지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려면 인건비는 반드시 수반돼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질의 요청사항에 포함되는 정보에 따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민간경상보조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서범수 위원 이 행사의 주관이 누구지요?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서범수 위원 중앙자원봉사센터에 전담인력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전담인력이 있는데 지금……

○서범수 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박정현 위원 아마 그게 조금 힘든 모양이에요.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경상사업비를 줄 때 그 안에 인건비가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시도라든지 시군구마다 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하거나 법인화되어 있거나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어렵게 한 명씩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고 중앙봉사센터는 저희가 전문인력까지 줘서 그 인원이 딱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박정현 위원님께서 증액하는 사업이, 한 4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또 이 업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 추가 채용해서 하는 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주면서 큰 사업을 주지는 않았습시다. 1억 이하의 사업을 줬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으로도 잘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또 자원봉사자 없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지금까지 잘 안 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달희 위원 인건비 이런 것 빼고 가시지요.

○박정현 위원 인건비를 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달희 위원 합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도 사람 많고……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원봉사자를 꾸려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전문적인 활동가가 붙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붙으면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이것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4억 3000……

○양부남 위원 4억 3000인데 1억을 덜 써 가지고 이 4억 3000의 효과가 감소할 수가 있지. 인건비를 넣음으로써, 4억 3000만 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게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범수 위원 중앙센터라는 데가 인력이 얼마나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7명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적은 돈 아끼려다가 이 큰돈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달희 위원 위원님, 캠페인을 하면 시도에도 그 정도의 인력이 있고 또 시군에도 인력이 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력이 있어서 이 캠페인을 이렇게 하자고 돈을 내려보내 주면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이것은 전국 코디네이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헉헉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업무를 내려보내 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서범수 위원 4억 3000 안에 그것을 조금 이용하면 안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줄어든다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5억 3000 안에서 사업비, 경상사업 보조할 때 그 인력을 쓸 수 있게끔, 용역을 쓸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전체는 주고……

○소위원장 위성곤 인력용역비로 쓸 수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단기 채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돈은 그냥 주고……

○서범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사업비로 주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사업은 보면 26년이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라서 그때 더 집중적으로 한 5억 정도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K-자원봉사단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1번 지역청년일자리 사업 건인데요. 지역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13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업개요 박스 안을 간단히 보시면 청년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비, 참여수당 또 이것 관련된 사업관리비 명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주청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도권 청년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취·창업 연계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뒷장 18페이지의 참고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진행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안부가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고용노동부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여기 참여수당 이런 내용을 보면 현금성 지원하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교육비라든지 훈련받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교육훈련비는 거기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수당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전담교육 받으라고 해서 참여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부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서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산업단지가 있는 쪽에 그 예산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방정부, 지자체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기업이나 영세 중견기업이 있는데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 정부랑 지자체랑 5 대 5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있거나 하면 비용을, 인건비를 대신 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고동진 위원** 왜 없어졌어요? 그냥 안 좋게 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왜 없어졌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게 전 정부 연계사업이라고 본 것도 있었고……

○**고동진 위원** 지난 정부, 전 정부 따질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성과가 없다고 봤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산업이 있는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 청년들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취지가 그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미스매칭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특히 인구감소지역이거나 소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틀이 지금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 가지고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인구소멸지역에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달희 위원** 가능합니다.

○**고동진 위원** 거기다가 또 인당 30만 원 주고……

○**박정현 위원** 이게 필요해요.

○**이달희 위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하면, 첫째 고용노동부사업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 진짜 공감합니다. 학원에 보내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것을 똑같이 할 게 아니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청년창업 이런…… 산자부나 이런 데 보면 청년 벤처기업 키우듯이 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차별화를 하자고요, 그런 펀드가 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가 고동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차별성을 줘야 돼요.

비슷하게 학원비 가고 학원 다니면 일비 보태 주고, 고용노동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 아닙니다.

○**이달희 위원**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 있네요. 거기 가더라도 플러스로 사후관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창업하거나 이럴 때 보태 주고 해서 확실히 차별된 사업이었다는 것도 증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가자고요.

○고동진 위원 오히려 그렇게 가져가는 게 방법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대기업 가라고 교육시켜 주는 게 아니지요. 일단 시군구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만드는 소규모 마을기업이나 사회경제연대가 있는데 여기 몇 명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개월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거기 취업 연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그만큼 예산지원을 해 줄 거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자리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50%가 넘게. 그러면 그 예산이 다 그리로 갑니다. 대전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전만 해도 중견기업이 꽤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지역특화산업, 우리가 유지하는.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데로 떠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안 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돈 다 회수받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뭐 회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자체가 그런 사람을 잘 선정해야지요, 면접도 하고 해서. 이게 뭐 수백명……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 선정이 돼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서범수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선정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개의 지자체를 일단 해서……

○서범수 위원 10개 지자체에 1000명?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10개 지자체에 1000명.

그리고 하나만 좀 확인해 봅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승계한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승계를 한 것은 아니고 좀 다릅니다.

○서범수 위원 비슷하다, 좋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역일자리에는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종료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원래 25년에 종료하기로 한 겁니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왜 그러냐면 보조금사업 평가에서 안 좋게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그것을 반대했지만……

○서범수 위원 안 좋게 받았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새롭게 설계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제목을 단 게 지역청년일자리 사업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왜 정부안에 안 들어갔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어서,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84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90점 못 받았다고 평가가 낮다고 그런 겁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이번 정부안에 말이지요. 이번 정부안에 왜 안 됐느냐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왜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정부 출범이…… 이게 5월 말까지 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5월 말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예 안 된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정과제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또 추가로 8월 말까지도 받아 주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득을 잘 못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행안부가 이것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안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업무니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2번 한국섬진흥원 지원 건입니다.

섬진흥원에서 섬 정보·통계 DB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출연금으로 14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고요. 섬진흥원의 연구 역량이라든지 또 진짜 세계 최고의 섬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고동진 위원 이해관계 충돌 같은데, 이것?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이 이해관계인데 이것은 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목표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끼지 않은 저 같은 경우가 났어야지 이게 이해관계……

○고동진 위원 아니, 이런 것은 해야지.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그다음에 23번입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 건인데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에 공원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360억인데 내년에 필요한 부분 국비 18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 위원장님 관심사항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제주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먼저 변경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은 또 문체부 국고보조사업 소관이었고 또 지방 이양이 다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재정 당국의 반대도 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수용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달희 위원 일단 올려 보고 잘리면 어쩔 수 없고, 올려 보시지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강정해군기지 지원 사업에 있었던 지역발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계획이랑은 별도로, 이것은 그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문체부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방 이양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폐지를 하고요, 이 사업은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앞의 전제가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수용하셔야 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4번 특수상황 지역개발 세부사업 건인데요.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인제군 주민복지시설 진·출입로 안전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4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홍성군 죽도 생태 탐방로 및 둘레길 설치를 위해서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사업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 여건상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해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은 올려 보시지요, 그래 가지고 잘리면 잘리는 거고.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인제하고 뭘 상관이……

○박정현 위원 홍성하고 뭘 상관 있어요?

○이달희 위원 둘 다 올려서 개인 의원들이 기재부하고 관계에서……

○고동진 위원 일단은 올려 놓고 보시지요.

○서범수 위원 올려서 뭐 잘리면 잘리는 거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간사님이 하신 거니까, 고동진 위원님께서 하신 거니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5번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2건의 증액 반영 요구가 있으신데요. 먼저 춘천시 춘천 소양8교 건설 예산입니다. 35억 원 신규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양주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1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소양8교 관련해서는 사업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지난 8월에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용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용 곤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춘천 소양8교 건은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반대 안 했다고 하면 좀……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인심이 넉넉하시니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세부사업 건인데요.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 설치 2건인데 이것의 국비 보조율을 지금 50%로 돼 있는 것을 100%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62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성공적인 사업,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국비 보조율을 100%까지 올리는 것은 재정 당국에서 강한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50%보다는 조금 높여 주시되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의견이 8 대 2나 7 대 3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들어가면 관심도 있거든요. 관리도 필요하니까 지역에서 같이 조금 보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 100% 이러면 나라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데 설치하고 관리도 하라는 측면에서 돈도 보태라.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 원래 지방정부 업무 아닙니까, 이 업무가?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인데 그 업무를……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5 대 5로 해 왔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5 대 5로 지원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5 대 5로 지원해 왔는데……

○이광희 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사업이긴 한데 지자체에서 사건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화장실 사건이. 그런데 돈을 투자하자니 좀 애매한 이런 지점이 있어서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는데 20%든 뭐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한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20% 상향하는 금액으로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저도 이야기해야……

○서범수 위원 양부남 위원님이 하셨네.

○소위원장 위성곤 이미 다 써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양부남 위원 다시 써야지요, 헌법도 개정하는데 뭐.

○소위원장 위성곤 예,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이것을 지방비를 매칭하면 이게 아마 무용지물이 되고 지방에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도 발의했거든요. 지방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전벨 설치 의무화 이게 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은 경찰력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국비 100%로 했던 겁니다. 지방에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장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경찰력 낭비가 되고 우리 사회 치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동진 위원 20% 정도를 증액해 놓고, 왜냐하면 법안 검토하실 때보다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저렴한 비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사업비가 63억이 있는 거잖아요, 50%로 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상벨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화장실 내에 불법으로 그런 것을 하는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탐지 시스템이 카메라 설치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것……

○소위원장 위성곤 CCTV 설치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도촬 탐지 시스템입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지요. 화장실 안에 어떻게 그런 것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화장실 안에 불법 카메라 있는 것을 탐지하는 그런 것……

○고동진 위원 그렇지, 그것을 탐지하는 기능을 넣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CCTV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 그런 게 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양부남 위원 탐지하고 비상벨을 설치한다 이거지.

○고동진 위원 그럼.

○소위원장 위성곤 어떻게 탐지합니까?

○박정현 위원 기계가 있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나와서 카메라 이런 것을……

○양부남 위원 알람이 가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또 기술이 발전돼서 그것을 전파 방해나 전자파로 확인하면 사람이 가서 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다만 우려하는 것은 양부남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받으면 국비가 모자랄 정도로 되고 많이 돼 가는데요. 이것은 또 신

규모 설치해야 되니까 국비 지원율이 낮으면 많이 신청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는 다 하겠는데. 학교부터 하시겠는데요.

○양부남 위원 그것 나눠서 비상벨은 100% 국비로 하고 탐지 시스템은……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이게 보조 비율을 높이면 지원금액이 줄어드니까 개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요?

양부남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주시지요.

○양부남 위원 제 중재안은 비상벨은 100% 국비로 하고 탐지 시스템은 국비 비율을 50%보다 좀 상향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고동진 위원 그 정도로 하면 되지, 그 정도로만.

○양부남 위원 그래서 비상벨은 100% 국비로 하고 탐지 시스템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7 대 3이나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둘 다 통일을 하지요, 보조금 주는데.

○양부남 위원 아니요,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을 냈습니다, 중재안을. 비상벨은 국비 100%, 탐지시스템은 국비 70, 지방비 30.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2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아, 이게…… 죄송합니다.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이 그 뒷부분에도, 24쪽 맨 밑의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 설치……

○박정현 위원 이것은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개수 자체를 지금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2500개에서 5000개소 그다음 비상벨은 3500개소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4000개소로 늘리기 위한 예산 35억 7500만 원입니다.

○서범수 위원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양부남 위원 똑같은 거네?

○박정현 위원 아니, 이것은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저는 개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보조 비율은 높이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다 합니다, 안 할 수 없을 텐데.

다음 진행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7번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이 많으셨던 건인데요. 고향사랑e음 이게 전액 지방비로 구축·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전환시키기 위

한 예산 3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거지요, 지금 전체 비용이? 전체 비용이 38억인가요?

○소위원장 위성곤 38억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38억 이 안에 들어갑니다. 삼십칠억 몇천만 원 정도.

○박정현 위원 예, 저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없으면 시군에서 사용료 n분의 1로 나눈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료.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광희 위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고향사랑e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외의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지자체별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으로 전국이 다 맞물리게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사랑e음 같은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따로 만들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30% 증액해서 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중앙집중적인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고향사랑e음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중앙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났던 건데 그 돈을, 구축비를 국가에서 대든 지자체가 대든 어디서든 대긴 대는 건데 이것 자체가 저는 e음을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는 e음을 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38억 원 증액해서 e음 시스템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렇게도 보실 수 있다는 것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민간 플랫폼도 8개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는 조금 억울한 게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만들게 될 때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위탁이라든지 시스템을, 플랫폼을 구축해도 거기에 어느 정도 비용은 내야 되고요. 저희는 그것을 243개 만들었을 때 나가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든다라고 효율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차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을 폐쇄하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순위는 고향사랑e음이 사실은 지방정부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 완벽하지가 않고 오히려 민간 플랫폼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고향사랑e음이랑 연결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왜냐하면 주소지 확인하고 지방세 납부 부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간 플랫폼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 자원 불난 것 때문에 사후 점검하기로 했잖아요. 검토하기로 한 것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 민간 플랫폼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 플랫폼을 고향사랑e음에 연결해서 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또 미안한 게 그 사후에 한 것은 다 공무원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것을 갖다가 입력해서 사후에 해 줘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차관님, 이와 관련해서 토론은 나중에 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과 관련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비가 이렇게 중앙에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통과시키는 건데 다양한 민간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허용하겠습니다, 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현장의 소리를 줘……

○소위원장 위성곤 여기까지만 하지요.

○이달희 위원 부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달희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것 찬성하면서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 출향인사들이 주로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건데 그런 출향인사들이 기부할 정도 되면 연세도 많고 이런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국민 입장에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구

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38억을 국비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것을 플랫폼을 쓸 수 있으니까 득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게 그다음 사업들이 전부 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인데 꼭지가, 가짓수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여서……

○소위원장 위성곤 특별하게 논쟁될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28번까지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번 사항, 먼저 첫 번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동두천시 기지촌의 잔해-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 개요 보시면 전체 총사업비 343억 원 중에 내년 필요비 23억 원에 대한 신규 요청 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하려면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먼저 반영이 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아직 안 된 사업이라서 제가 이것 예산을 수용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동두천시 국도 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68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횡성군 미래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안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사업은 발전계획에는 다행히 반영은 되어 있고 증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사실상 수용.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칠곡군 북삼 인평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4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도 칠곡군 사업인데요.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칠곡군 오평-덕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칠곡군 북삼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가능하고요.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사천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연계 정주거점 구축 사업을 위해서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것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양산시 신도시-공단진입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4억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발전종합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부산진구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부산 동구 부산진시장 지하차도 상부 복개 공사를 위해서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주한미군 주변지역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종합발전계획에 미반영된 것 여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서범수 위원 그것은 빠지요. 저도……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 저도 빼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오케이.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본회의 끝난 이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박정현 위원 아니, 주변지역에 아까 고동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두천시 이것은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건가요?

○고동진 위원 아니 아니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반영 안 하시는 것으로……

○서범수 위원 그것은 발전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고동진 위원 전체 발전계획에 그게 들어가야……

○박정현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7인)

고동진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달희

○청가 위원(1인)

김성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디지털정부정책국장 이세영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최영묵